
2020년도 대구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0. 12

대구시설공단

제 출 문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20년도 대구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04.

한국경영인증원

목 차

I. 인권경영 환경 분석 및 현황	4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4
2. 사업 분야 인권 이슈	8
3. 공단 인권경영 운영 현황	10
II. 인권영향평가 실행	14
1. 실시 주체 및 범위	14
2. 평가 절차 및 방법	14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15
III. 인권영향평가 결과	19
1. 인권영향평가 종합	19
2. 기관운영 평가결과	20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22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26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28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30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32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34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7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39
분야 9. 환경권 보장	40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43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45
3. 주요사업 평가결과	47
IV. 인권경영 주요 개선과제	50
1. 인권경영 개선 추진 권고	50
2. 영향평가 분야별 개선과제	51

I

인권경영 환경 분석 및 현황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 국제 인권경영 동향

- 197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관련 연구·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성 및 영향 범위 확대 추세

[국제사회 인권경영 추진현황]

- 유엔인권위원회(UHRC)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2011년)
-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3자 헌장 발표(1977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1976년)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UN Global Compact, GRI, OECD Guideline 등 인권경영 표준화 확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지침]

- 국제연합의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Initiative)가 표방하는 기준과 절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정리·체계화한 결과물
- 기업들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기업에 인권존중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들 스스로 실천, 점검해야 할 의무(Due Diligence)를 강조

□ 국내 인권경영 동향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018~2022)’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고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대한 과제를 공공기관에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여 인권경영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수행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구분	요구사항	비고
인권경영 체계구축	1.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2.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3. 기관 내 각 부서 확산 4.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
인권영향 평가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6.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7.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8.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9.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기관운영 평가, 주요사업 평가로 구분되며,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방하거나 최소화
인권경영 실행/공개	10. 인권경영 실행 11.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투명성 제고, 홍보효과, 책임성을 높임
구제절차 제공	12.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13. 구제절차 수립 14. 구제절차 시행 15.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 본 체크리스트는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 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점들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
- 인권영향평가 수행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원칙과 운영원칙, 체크리스트 이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 필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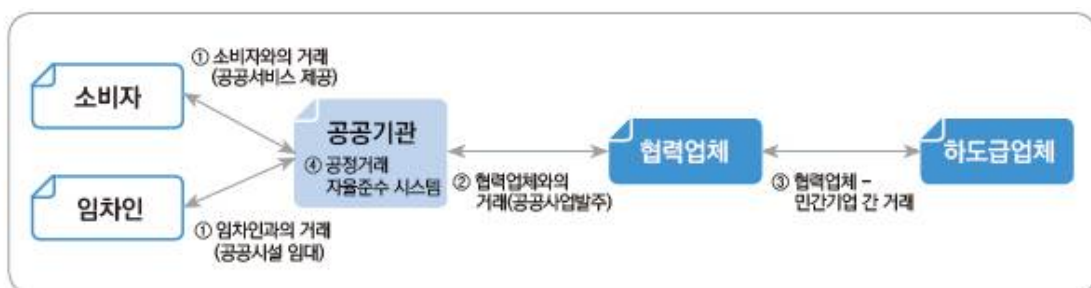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자신의 기업 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 존중해야 함 ○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하는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것뿐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
운영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환경권, 소비자인권 등 10개의 각 이슈별 ‘원칙’을 제시 ○ 원칙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이슈별 규범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이슈별로 큰 원칙을 읽어서 이해한 후 질문을 읽기 ○ 질문에 대한 답은 5가지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해당 답변에 표시 ○ “아니요”로 나오는 항목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된 항목에 대해 사전 조치하기 위한 것(취약지점을 발견하는 도구) ○ 신뢰성을 위해 노조나 여타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

(시사점) 공단은 국내·외 정책/제도, 법률 등에서 인권경영 체계구축, 실행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 대응을 요구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정례적인 인권영향평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인권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을 발표함
- 모범거래모델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임
- 많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중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분야에 취약한 상황이며, 공사의 2020년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지표에 모범거래모델의 주요 지표를 반영하여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모범거래모델의 유형]



거래관계	주요내용	모범거래모델 유형
①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 	I. 對 국민 거래관행 개선
② 협력업체와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사업 발주자와의 일차적인 거래관계 공동계약 등 협력업체 	II. 對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③ 협력업체-민간기업 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이 최종 구매자인 계약관계(value chain)에서 직·간접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하도급) 	III.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④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하는 내부준칙 지방계약법 등 법제도적인 측면 	IV.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2. 사업 분야 인권 이슈

□ 인권침해 실태 조사

- 국내 시설관리공단 내·외부 감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인권침해 문제는 채용 청탁, 비정규직 수당 차별지급 등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고용상 차별 문제’, 공단 운영 시설 내 입점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갑질 등의 ‘공급망 관리 문제’, 공단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 상업적 재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인권침해문제’,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이용 편의 보장 미흡과 공단 시설 이용객 개인정보 관리 미흡 및 성 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 취소 등 ‘시설 이용객에 대한 인권침해문제’ 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특히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승강기 미설치, 점자 보도 블록 미설치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이용 편의 보장 미흡과 시설 이용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이해관계자 인권침해’와 성폭력, 희식 등의 공동 활동 공간에서의 성폭력 발생 등의 성 인권침해 및 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등의 ‘조직 내 인권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유관기관 인권침해 사례

- 유관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상 차별, 헌법상 노동3권 침해, 조직 내 인권침해, 강제노동, 성희롱·괴롭힘 행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 및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지역주민 인권침해, 환경권 침해, 안전 사고 등의 문제가 확인됨

(시사점) 공단 운영 시설 이용객에 대한 이용 편의 보장, 공단 노동자의 고용환경과 안전사고 문제, 자회사·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 주요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환경권 침해와 지역주민 인권침해 등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제3자 심사에 따른 중립적인 인권영향평가 수행 필요

[유관기관 인권침해 사례 분석]

분야	사례 내용
고용상 차별	1) 채용 시 차별: 블라인드 채용 미 준수,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사례 多 (2019년 A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특정한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수사 중, 2019년 B시설관리공단 채용 성적표 조작) 2) 남녀 차별: 직무와 무관하게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성별에 따른 승진·교육·배치 시 차별 3)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차별(수행업무에 따라 정규직군과 비정규 직군 구분)
조직 내 인권침해	1) 폭력행사: 언어 및 신체적 폭력 행사, 징벌적 교육훈련(2015년 C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의 조합원 폭행 사건) 2) 성인권침해: 성폭력, 희식 등의 공동 활동 공간에서의 성폭력발생과 가해자 재발 방지 미흡(의정부 시설관리 공단 직원의 동료 직원 책상 밑 몰카설치 사건) 3) 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상사의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 동원(A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갑질사건)
노동 3권 침해	1) 노조 설립·활동 방해(D시설공단 제3노조 설립 시 기존 노조원 빼가기 및 노조원 회유) 2)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한 처분 3)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강제노동	1)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초과노동강제(E시설공단 기간제 근로자 강제 야간 당직근무 및 수당 미지급) 2) 근로자 사직서 수리 거부 및 출근 강요 3) 자회사,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강제노동
지역주민 인권침해	1) 주민 기피시설 설치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미비로 인한 갈등 2) 상업적 재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 (F 시설관리공단의 경의선 용지 개발 갈등) 3) 공단 시설 이용객 개인정보 관리 미흡 4)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이용 편의 보장 미흡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승강기 미설치, 점자 보도블록 미설치등)
환경권 침해	1) 환경정보 공개 미흡 2) 관리 시설 내 응급조치 시설 및 장비 확보 미비
공급망 관리	1) 협력업체 근로자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미흡 2) 외주·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갑질,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수수(C시 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지하푸드물갑질')
안전사고	1) 사업 시행·운영 시 산업재해 발생

3. 대구시설공단 인권경영 운영 현황

□ 공단 소개

- 대구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대구시설공단 설치조례를 근거로 하여 대구시에서 1993년 설립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임
- 공단은 설립 이후 가로등, 공영주차장, 공용도로 등 기초 인프라 시설 관리 및 두류수영장, 대구국제사격장 등 문화·체육시설도 함께 관리 중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대구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설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단의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의 임원 및 이사장 직속의 감사파트와 사업운영본부 내 경영지원처, 재난안전처, 체육시설운영처, 시설관리처 도로교통본부 내 기술지원처, 도로관리처, 교통운영처, 이동지원처 총 8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경영 추진 현황

- 공단은 ‘18년 12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갖고 인권경영 헌장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총무인사팀을 지정하고 감사실과 연계한 “청렴해피콜” 등 인권감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경영 제도화 조치를 이행함
- ‘19년 10월 ‘인권존중정책 선포식’을 통해 직장 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권존중을 강조함
- 공단은 인권경영을 위한 자문기구로 인권 관련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부3명, 외부4명)의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19년 9월 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영활동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권경영의 체계를 발빠르게 구축함

[인권경영 추진체계]



- 공단은 ‘20년 인권경영 2년차에 접어들어 조직 내·외부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인권경영 추진 현황]

분야	상세 내용
인권경영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18.12.)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18.12.) - 인권경영헌장 제정('19.06.)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19.09.) - 제2차 인권경영 선포식('19.10.)
인권경영 추진조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위원회 7명 구성(내부3명, 외부4명) - 인권경영 전담조직 지정(총무인사팀) - 청탁방지담당관, 성폭력· 성희롱 고충상담원, 인권경영담당관 지정
인권보호 활동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사내 내부망을 이용한 성희롱 관련 자료실,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창구, 공직비리 및 갑질 익명신고 게시판 운영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 및 전파
인권영향평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1차 인권영향평가 실시(19.12) - 2차 인권영향평가 실시(20.12)
인권침해 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 엔젤클럽(고객모니터단),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 (내부) 부패· 부조리신고센터(청신호 콜센터), 공익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레드휘슬 헬프라인,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 협력업체 사랑방, 청년옴부즈만, 청렴해피콜 운영
인권경영 확산 및 성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019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 공개 완료 - 2차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 공개 예정 - 2020년 인권경영 성과 공개 예정

□ 인권경영 SWOT 분석

- 공단은 정부의 인권경영 실행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18년 12월부터 인권경영 제도화 준비 및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장기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음
- 공단은 체계 구축 이후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의 범위 확대 및 인권경영의 체제가 확산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적 특성과 규모에 맞는 인권경영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모범적으로 인권경영을 수행해 나가는 타 기관의 세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음
- 전사 인권경영의 확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의사결정기구, 전담기구, 실행조직 간 상호 협조하는 유기적인 구조를 만들고, 각 주요 사업별/인권 분야별 인권경영 추진 인력을 지정하여 부서별 R&R을 재정립하여 본격적인 인권경영 활동과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임

내부역량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 노사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행의지		■ 다양한 사업운영에 따른 관리 복잡함 및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Opportunity	기회	(SO) 역량강화		(WO) 기회포착	
■ 인권존중 문화 확산 ■ 인권보호 관련 법령 강화 ■ 공공기관 Good practice 발굴		■ 인권경영 전사·단계적 추진을 위한 담당조직 역량 강화 ■ 인권경영위원회 역할 확대 및 객관성·독립성 유지		■ 인권경영 실행 강화 ■ 인권침해 구제절차 고도화 -인권경영 대내외 홍보 강화 -신속한 구제절차 이행 노력	
Threat	위협	(ST) 관리강화		(WT) 약점극복	
■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확산 인식 부족 및 과도한 개입(갑질) 충돌 문제 ■ 사업 특성에 맞는 인권경영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 노사 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인권경영 영역 외주화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경영 전문교육 시행 -상담/조사 담당자 전문성 확보	

II

인권영향평가 실행

1. 실시 주체 및 범위

□ 평가주관 :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평가위원, (내부) 총무인사팀

□ 실시기간 : 2020년 9월 22일 ~ 12월 4일

□ 평가범주

-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공공 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기초로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주요사업) 공단의 '나드리콜 사업' 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2.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내 부) 1차) 워크숍, 2차) 서면평가
- (외 부) 3차) 세부항목별 담당자 인터뷰, 4차) 전문가 평가
- (위원회) 5차) 인권경영위원회 보고(의견수렴)

□ 평가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표와 원칙,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운영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별 객관적 증빙자료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여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최소화
- 인권경영 추진 담당자 및 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워크숍과 지표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지표 확정

- 내부 자체평가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예”로 응답한 지표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아니요” 답변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개선과제 도출 중점)
-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지표의 특성상,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지표에 대하여 실무담당자 외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예를 들어, 고용상 비차별 분야 중 비정규직의 비차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실무담당자 평가 → 비정규직 평가 → 외부 전문가 평가의 절차를 거침)
- 인권경영 전담부서인 총무인사팀의 주도 하에 현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 협력 부서(관련부서)에 배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수정의견을 반영
- 최종 취합된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 평가체크리스트 개발방법

(기관운영)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미디어 리서치, 관계자 인터뷰, 조직 및 업무현황 조사 등을 통해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세부지표 확정
-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인권 보호 1개 분야 2개 항목 10개 지표 추가

(주요사업)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공단의 대내외환경 및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사업,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 이슈 연계성, 파급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드리콜 사업”을 선정
- 사업수행 단계별 주요 이해관계자, 업무절차 및 수행현황 등을 파악
- 내부이해관계자 검토를 거쳐 3개 항목 12개 세부지표 확정

□ 항목 수 및 지표 수

(기관운영)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5개/30개	6	산업안전보장	4개/17개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17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개/10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개/16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개/10개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11개	9	환경권 보장	4개/18개
5	아동노동의 금지	2개/14개	10	소비자인권 보호	3개/15개
11	직장 내 인권보호	2개/10개			

(주요사업) 1개 분야 3개 항목 12개 지표

구분	사업	분야수/지표수
1	나드리콜 사업	3개/12개

□ 기관운영 평가 지표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3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7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6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11
		자회사,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5
		제품결함 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11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0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주요사업 평가 지표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나드리콜 사업	사업의 인권체제	12
		이용자 인권보호	
		근로자 인권보호	

Ⅲ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인권영향평가 종합

- 공단은 2018년 12월부터 발빠르게 인권경영체계 롤링을 통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성, 전문성 관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관운영 체크리스트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91.4%로 전반적으로 법규와 주요 인권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음.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고용상 비차별,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보장 까지 5가지 분야에서 일부 보완 필요 및 미실시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여타의 분야에서는 미흡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는 시설물 위수탁 유지관리 업무의 특성과 관리감독 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공단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며, 공단은 타 공단의 Good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권경영을 이행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주요사업은 “나드리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95.8%로 우수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됨. 일부 인권경영 체계가 사업분야에 여전히 흡수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협력사와 긴밀히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상 협력회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인권경영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고객의 인권보호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협력사로 인한 인권침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인권경영 추진 2년차인 2020년 현재 조금씩 가시적인 인권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공단의 ‘시민들의 인권지킴이 대구시설공단’이라는 비전아래 그간의 미흡한 부분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을 세우고, 추진목표, 추진과제, 모니터링과 운영조직을 포함한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작동하여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함

2. 기관운영 평가결과

□ 종합 점수 : 91.4% (278점 중 254점 획득)

-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우수한 상태
-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아동노동의 금지, 소비자 인권보호,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는 우수
- ▶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보장 분야는 미흡·보완 필요
-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는 해당없음으로 평가



No.	분 야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30	60	56	93.3%
2	고용상의 비차별	14	28	26	92.9%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6	32	32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8	16	16	100.0%
5	아동노동의 금지	4	8	8	100.0%
6	산업안전 보장	17	34	27	79.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16	10	62.5%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	환경권 보장	17	34	30	88.2%
10	소비자인권 보호	15	30	29	96.7%
11	직장 내 인권 보호	10	20	20	100.0%
총점		139	278	254	91.4%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요×0점)+(정보 없음×0점)]÷(해당 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기관운영 점검 집계결과

- 총 168개 항목 중 예 116개, 아니요(미실시) 0개, 보완필요 22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30개로 집계됨
- (아니오)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환경권 보장 일부 항목 주요 개선과제 반영
- (보완필요) 인권경영 체계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보호 분야 일부 항목 개선과제 반영
- (정보없음) 해당지표 없음
- (해당없음)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일부 지표는 점검일 현재 공단 활동과 직·간접적 해당사항이 없으며, 향후에도 관련성이 없음
- (개선과제) 지표별 미이행 과제(‘아니요’, ‘보완필요’, ‘정보없음’)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예’로 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5개 항목)	26	4	0	0	0	30
2	고용상의 비차별(4개 항목)	12	2	0	0	3	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4개 항목)	16	0	0	0	0	16
4	강제 노동의 금지(2개 항목)	8	0	0	0	3	11
5	아동노동의 금지(2개 항목)	4	0	0	0	10	14
6	산업안전 보장(4개 항목)	11	5	0	1	1	18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3개 항목)	2	6	0	0	2	1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2개 항목)	0	0	0	0	10	10
9	환경권 보장(4개 항목)	13	4	0	0	1	18
10	소비자 인권 보호(3개 항목)	14	1	0	0	0	15
11	직장 내 인권 보호(2개 항목)	10	0	0	0	0	10
합 계		116	22	0	5	30	168

◆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운영현황)

- 공단은 2018년 12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가졌으며, 이후 인권경영 내규 제정
- 공단은 2019년 10월, 인권존중정책 선포식을 개최하여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 공단은 2019년 12월, 인권경영선포식 개최 후 공단 내 자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

(평가요약)

- 공단은 2019년 연말 자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인권경영체계를 비교적 조기에 완료하였음
- 공단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협력업체의 인권침해 사고의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권고의견)

- 공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 이해관계자인 시민의 안전과 건강, 공정한 이용권리 보장 내용을 추가하기 바라며, 인권경영현장은 홈페이지 게시 외에 공단 내 곳곳의 길목에 게시하여 임직원 및 외부 방문객들이 쉽게 접하며 인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권고
- 협력회사의 인권 침해 사고 발생 시 원청사로서 예방 및 사후조치 면에서의 적극적인 개입,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할 것과 내규 상에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의 구제 절차를 별도로 명기할 것을 권고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p>	No	항 목	계
	1	인권존중정책 선언	91.7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2.9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90.0
	4	인권경영 성과	100.0
	5	구제절차 마련	91.7
	전 체		93.3

□ 분야1. 항목별 결과

1.1) 인권존중정책 선언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2018년 12월 인권경영선포식을 가졌으며 이후 인권경영 내규가 제정되고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었음. 1년 후인 2019년 10월에 또 한번의 인권경영 선포식을 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았음 - 선언문은 공개적이고 결격사유는 없으나 홈페이지 게시 정도로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경영현장을 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오프라인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권보호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것을 권고, 즉 공단의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이 공단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안전과 건강을 저해하지 않을 것과 공정한 이용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 인권경영현장은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말고 액자 형태로 만들어 공단 곳곳에 게시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자주 접함으로써, 인권의식 제고에 활용될 수 있기를 권고함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2019년 12월 두 번째의 선포식 직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음. 그리고 1년 만에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특이한 점은 고객모니터단인 엔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안전 등 인권문제 관련한 정보 및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주요한 창구가 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제도화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인권경영헌장 및 인권경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그리고 전임직원 인권교육에 이르기까지 착실하게 진행하여 왔음 - 공단은 인권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감사실과 연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며 협력사의 인권침해 사고 및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활동중 - 공단의 경우, 협력회사의 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은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열린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공단은 협력회사의 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은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열린 구제절차의 적용을 들고 있음. 하지만 이는 수동적인 대응이고 원청사로서 협력회사의 인권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기에 현재 보다 더 수준높고 책임감 있는 실행이 요구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회사의 인권 침해 사고 발생시에는 구제절차로 대응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현재 협력회사의 인권문제에 대한 원청사로서의 책임감과 그에 따른 예방 및 사후조치 면에서 적극적인 개입,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에 관한 내규 상에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의 구제 절차를 별도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협력회사의 인권침해사고 발생시 향후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포함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1.4) 인권경영 성과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경영지원군 3개팀 [총무인사팀, 회계팀, 감사실]의 인권경영,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성지표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리고 평가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가 열람 가능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성과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할 수 없음. 그 이유는 단 두 차례의 인권영향평가 뿐이었으며 그 중 한차례는 자체평가였기 때문. 따라서 본 지표를 만족하기 위해, 즉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변화추이를 관찰하기 위해, 향후 2년 이상 자체평가 혹은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동일 평가지표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을 권고

1.5) 구제절차 마련

<p>평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의 구제절차는 인권위의 매뉴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 등의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접근과 이용면에서 문제 없음.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신고자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음 -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 이를 방해하지 않고 적극 조력 해야한다는 방침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p>권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내규 상에 “타 구제기관(인권위, 경찰, 시민단체)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회유 또는 방해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조력한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운영현황)

-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내규 제3조 및 취업규칙 제6조, 인사규정 11조에 차별 금지 원칙을 명시함
- 공단은 일반직, 공무원직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음
- 공단은 복리후생에 있어 휴양시설 이용은 블라인드 추천방식을 통해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복지포인트, 근속포인트 등은 실버직, 계약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등 다소 차이가 있음
- 공단은 채용공고문,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정, 인사규정 등에서 어떠한 남녀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 2020년 현재 공단 내 외국인 노동자 없으며 이후로도 채용계획 없음

(평가요약)

- 공무원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적용상의 차별은 없다고 보 여지나, 공무원 외 일부 실버직에 대해서는 규정미비로 인한 복리후생 미적용 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됨

(권고의견)

-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고 복잡하게 타 규정 위임적용 형태로 얹혀있는 규정을 직접 명시하거나 일원화가 필요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p>	No	항 목	계
	1	고용상 비차별	80.0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80.0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해당 없음
	전 체		92.9

□ 분야2. 항목별 결과

2.1) 고용상 비차별

평가의견	-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적용상 차별은 없다고 보여지나, 공무직 외 일부 실버직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로 인한 복리후생 미적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됨
권고의견	-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고 복잡하게 위임적용 형태로 얹혀있는 규정을 단순화하거나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평가의견	- 일반직과 공무직은 적용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복리후생에 있어 적용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실버직은 정년 후 고용이라는 형태로 인하여 복리후생(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 - 명예퇴직, 조기퇴직, 경영개선 휴직은 개별 규정에서 근속에 따른 신청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요건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지 않음
권고의견	- 적용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규정상에서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차별적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 개정이 필수적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 특별히 공단 내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2.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 대구의 각종 체육·편의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업무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운영현황)

- 2020년 12월 현재 공단에는 상시근로자 수 총 900명 기준 3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 공단 내 노동조합은 일반직노조, 공무원직노조, 초기업노조(공무직 4명)이며, 공단은 각 노동조합과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통해 개별교섭하고 있음
- 공단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의견까지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단은 과반노조와만 교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각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공무직 노동조합 결성 후에도 근로자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됨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p> <p>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p> <p>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p> <p>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p> <p>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p> <p>0.0 20.0 40.0 60.0 80.0 100.0</p>	No	항 목	계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100.0
	전 체		100.0

□ 분야3. 항목별 결과

3.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평가의견	- 일반직과 공무원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제3노조가 결성되어 활발한 조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공단은 조합 활동 보장 및 조합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의 처우 금지

평가의견	- 공단은 조합활동 등의 방해할 포함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관련한 규정이나 계획을 수립한 바 없음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평가의견	- 공단은 일반직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성실히 교섭중이며, 조합의 요청,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 따라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임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3.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평가의견	- 공단은 제2노조 설립 전부터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공무원 중심의 근로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2노조 결성 후에도 근로자협의회를 계속 운영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완적 기구도 활성화 되어 있음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운영현황)

-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내규 제3조 제3호에 강제노동 금지를 명문화함
- 업무피크 시기에는 부득이하게 초과근무가 발생하지만 시간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관계자간 업무일정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어 과도한 초과근무는 발생하지 않음
- 공단과 협력하는 자회사 또는 협력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해당없음

(평가요약)

- 공단은 노동자가 원치 않는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시퇴근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의 강제노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또한 별도로 협력사를 두고 있지 않아 협력사의 강제 노동도 관련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됨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분야4. 강제 노동의 금지</p> <p>강제노동의 금지</p> <p>자회사,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p>	No	항 목
	1	강제노동의 금지
	2	자회사,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전 체	
		계
		100.0
		해당 없음
		100.0

□ 분야4. 항목별 결과

4.1) 강제 노동 금지

평가의견	- 공단은 입사 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원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거절과 자유로운 퇴사 보장을 하고 있음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4.2) 자회사,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평가의견	- 공단과 협력하는 외국 자회사 및 협력회사가 없어 ‘해당없음’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운영현황)

-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내규 제3조 제3호에 아동노동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 공단은 채용연령 하한을 명시하지는 않으나 만18세 이상인 자를 채용하고 있음
- 공단은 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본인 사진을 구비하도록 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단은 채용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아 아동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권고의견)

-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채용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현재 규정상으로 미성년자가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격이 없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연령 규정화를 권고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p>	No	항 목	계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0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 없음
	전 체		100.0

□ 분야5. 항목별 결과

5.1) 연소자 고용 금지

평가의견	- 인권경영에 관한 내규, 인권 선언문을 통해 아동노동에 대하여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다른 규정에 채용연령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음. 다만, 현실적으로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를 채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권고의견	- 아동노동 이외에 연소자,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은 규정화 되어 있지 않으며, 검토할 수 있는 방법에 규정화 되어있지 않아 이에대한 규정화가 필요함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평가의견	- 연소자고용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처리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운영현황)

- 공단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기,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 사업장 시설물 안전관리가 수행
- 공단은 17개부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을 완료함
-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 추진 계획을 통해 공단 전략과제로 안전 시스템 구축, 안전 역량강화, 사고환경 안전 개선의 중점 추진 분야를 결정하고 세부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평가요약)

- 공단 본부 및 사업장별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의 인증을 통해 안전 보건 경영 체계가 수립되고 유지되고 있음(KOSHA 18001 17개 사업장)
- 본사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운영관리를 위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권고의견)

- 본사의 경우도 안전보건의 운영관리에 따른 모니터링 및 측정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여 운영할 것 권고
- 시설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주기, 점검 결과를 절차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 권고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분야 6. 산업안전 보장</p>	No	항 목	계
	1	작업장 안전	8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75.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9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66.7
	전 체		79.4

□ 분야6. 항목별 결과

6.1) 작업장 안전

평가의견	-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한 시설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인증을 통한 운영관리가 수행되고 있음
권고의견	- 일부 완강기 입구에 비상 탈출을 위한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 할 것을 권고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내규 18조에 안전점검 관리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모니터링 주기 및 대상 방법 등의 세부 절차를 작성 운영할 것을 권고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평가의견	- 공단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점자블록, 출입구 출입로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기별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간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가족 친화 분야의 경우도 휴가제도 및 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제도 정착 및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공단 취업 규칙 제3절 24조 및 25조 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휴일근무 금지를 규정화하고 있음
권고의견	- 임산부, 장애인, 취약노동자 등 실제 인원 파악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해당자 파악 후 지원 계획을 실행할 것을 권고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평가의견	- 안전 관리에 필요한 필수 장비의 비치 및 정기적인 안전 교육이 수행되고 있으며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교육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되고 있음
권고의견	- 업무에 따른 유해 화학 물질의 경우 환경 및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관리가 수행되고 있으나 공단 전체의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장을 통해 등록 후 내부 의사소통이 수행될 것을 권고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평가의견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회의 시, 안전 사고현황과 대책이 보고되고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취업규칙에 재해 보상에 대한 기준추가 필요
권고의견	- 취업 규칙에 37조 병가 및 안전보건 내규 제6장에 사고조사 보고 및 대책 조항이 있으나 재해급여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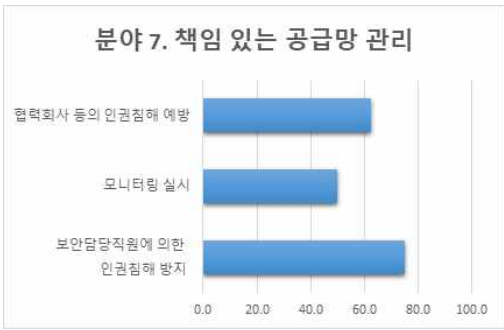
- 공단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청렴서약서 내에는 부패 관련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음
- 공단은 계약서상 인권보호·존중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협력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으며, 공단의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모니터링 활동은 없음

(평가요약)

- 전반적으로 협력회사의 준법관련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확인되나 인권분야의 준수 의무를 계약부터 계약 이행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내규의 제정 필요

(권고의견)

- 협력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계약 시 서약서 징구와 함께 인권침해 관련 사항 모니터링을 권고

결과 그래프		달성률(%)	
		No	항 목
		1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2	모니터링 실시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전 체	
			계
			62.5
			50.0
			75.0
			62.5

□ 분야7. 항목별 결과

7.1)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평가의견	- 기간제 계약직 직원 등 관리 내규에 따라 채용직렬 근로계약 보수 등이 정의되고 있으며 관리 내규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권고의견	- 협력회사 관리 규정의 제정을 통해 인권상황 평가 방법 및 절차 제정을 권고

7.2) 모니터링 실시

평가의견	- 협력사의 인권침해 관련 모니터링은 수시로 협력사의 업무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음
권고의견	-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 확인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협력업체 계약이행 단절을 계약서에 명문화 권고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평가의견	- 공사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사항 없음
권고의견	- 계약직 관리 내규의 경우 각 조항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문화되고 있으나 별도로 정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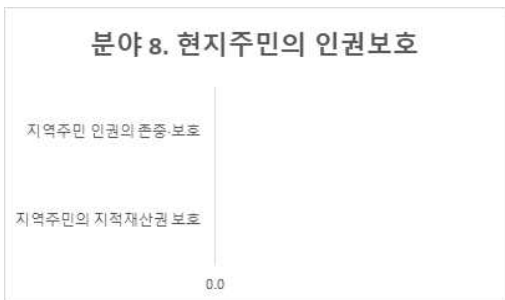
- 공단은 소유 토지가 없으며 향후에도 토지 소유 계획 없음
- 공단은 지적재산권 관련 수행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획 없음

(평가요약)

- 타 공공기관과 달리 공단은 공급자 및 이용자가 한정적이며 일반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지역주민 인권존중·보호와 관련한 지표는 공단과 무관한 지표이므로 '해당없음'으로 평가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한 지표는 공단과 무관한 지표이므로 '해당없음'으로 평가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달성률(%)		
	No	항 목	계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해당 없음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해당 없음
	전 체		해당 없음

☐ 분야8. 항목별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분야 9. 환경권 보장

(운영현황)

- 공단은 도로포장팀 외 5개 사업팀을 대상으로 SO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환경 경영 시스템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음
- 공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음
- 공단은 온실가스 목표제에 따라 저감 계획을 세우고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공단의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지침은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있음

(평가요약)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온실가스 목표제의 이행에 따른 환경경영 체계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환경 측면과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운영되고 있음

(권고의견)

- 환경 경영시스템의 구축 상태는 양호하나 유지에 따른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의사소통 및 정보 공개 부분은 추가 개선을 권고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분야 9. 환경권 보장</p>	No	항 목	계
	1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100.0
	2	환경정보의 공개	83.3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87.5
	4	비상계획 수립	80.0
	전 체		88.2

□ 분야9. 항목별 결과

9.1)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 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시스템의 정도는 양호하게 실행되고 있으나, 외부 이해관자와 관련된 환경 분야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반영하여 운영 필요 - 주요 환경 측면의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환경 측면의 경우,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 - 환경 목표에 따른 개선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과 개선 담당의 명확한 지정 등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권고 - 교육 훈련 계획에 환경관련 교육 계획과 실적을 함께 관리할 것을 권고

9.2) 환경정보의 공개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방침이외에도 관련 이해관계자에 환경 모니터링 결과, 준수평가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의사소통이 필요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환경 측면과 관련 법규의 준수평가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여 관련 정보에 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할 것을 권고 - 업무 수행에 따른 환경 영향 측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노동자,고객,공급자,지역사회 등) 참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음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측면의 등록·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의 예방·관리 체계는 양호하게 구축되고 있으나 환경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해 각 프로젝트별 환경영향 평가 필요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환경 영향평가 이외에 신사업 및 신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정리할 것을 권고 - 환경오염 비상사태에 따른 별도의 환경 책임보험 가입상태 확인 권고

9.4) 비상계획 수립

평가의견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체계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권고의견	-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환경 비상사태의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 - 공단과 관련 기관의 비상연락시스템(경보 장치)의 운영 상태는 확인 권고

◆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운영현황)

- 공단은 수영장의 수질관리 약품(염소)의 적정량 사용, 시설물에서의 미끄럼 방지 대책, 시설물의 전도, 파손으로 인한 사상의 위험 등에 대해 주무 부서인 재난안전팀에서 시설물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요금 등은 대구시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1회 요금, 월 정기권 요금, 노약자 할인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 중
- 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전단 및 배너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 없음

(평가요약)

- 공단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제품결합시 조치,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 3가지 면에서 대부분 지표를 만족하고 있음. 다만 제품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평가의 절차 및 방법이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은 이용자의 안전, 편의성, 사생활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조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 실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 이용자의 안전, 보건, 그리고 환경 등의 인권문제 발생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전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

결과 그래프	달성률(%)																									
<div>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div> <table><thead><tr><th>항목</th><th>달성률(%)</th></tr></thead><tbody><tr><td>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td><td>91.7</td></tr><tr><td>제품 결함 시 조치</td><td>100.0</td></tr><tr><td>소비자 사생활 보호</td><td>100.0</td></tr></tbody></table>	항목	달성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91.7	제품 결함 시 조치	100.0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0	<table><thead><tr><th>No</th><th>항 목</th><th>계</th></tr></thead><tbody><tr><td>1</td><td>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td><td>91.7</td></tr><tr><td>2</td><td>제품 결함 시 조치</td><td>100.0</td></tr><tr><td>3</td><td>소비자 사생활 보호</td><td>100.0</td></tr><tr><td colspan="2">전 체</td><td>96.7</td></tr></tbody></table>			No	항 목	계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91.7	2	제품 결함 시 조치	100.0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0	전 체		96.7
항목	달성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91.7																									
제품 결함 시 조치	100.0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0																									
No	항 목	계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91.7																								
2	제품 결함 시 조치	100.0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0																								
전 체		96.7																								

□ 분야10. 항목별 결과

10.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평가의견	- 공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이용자에게 가격, 이용시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정보에 의한 격차를 없애기 위해 외국어 병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서비스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명확한 절차는 다소 미흡
권고의견	- 시공 설계에서부터 안전과 보건, 환경과 같은 인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설계검증 프로세스를 추가할 것을 권고

10.2) 제품 결함 시 조치

평가의견	- 공단은 서비스의 결함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위험성을 즉시 알리고 사용을 제한하며, 향후 조속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또한 만약 이용자가 시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시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갖추고 있음 - 위험한 이용시설 중 하나인 다이빙장의 경우, 높은 다이빙대는 허가받지 않은 이용객의 출입을 제한하며, 한영 병기된 경고 표식을 두고 있음. 또한 나드리콜 교통사고 방지, 수영장 미끄러짐 방지 등에 대해 경고와 주의를 하고 있음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10.3) 소비자 사생활 보호

평가의견	- 공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초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얻은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이 있으며,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체육시설 예약, 임대상가 계약, 명복공원 화장장 이용 시 등에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내규를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에 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공단은 1년에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담창구 절차에 관한 근로자들의 인지수준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에 있음
-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내규를 제정하고,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예방내규 제10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단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입직원과 재직자에 대한 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들에게 권리구제창구에 대한 안내를 주기적으로 하여 권리침해발생 시 빠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준수한 것으로 평가됨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분야 11. 직장 내 인권보호</p> <p>The chart shows two categories: '직장 내 괴롭힘 방지'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and '직장 내 성희롱 금지' (Prohibition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Both categories have a blue bar extending to the 100.0 mark on the x-axis, indicating 100% completion.</p>	No	항 목	계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00.0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00.0
	전 체		100.0

□ 분야11. 항목별 결과

1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평가의견	- 매년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임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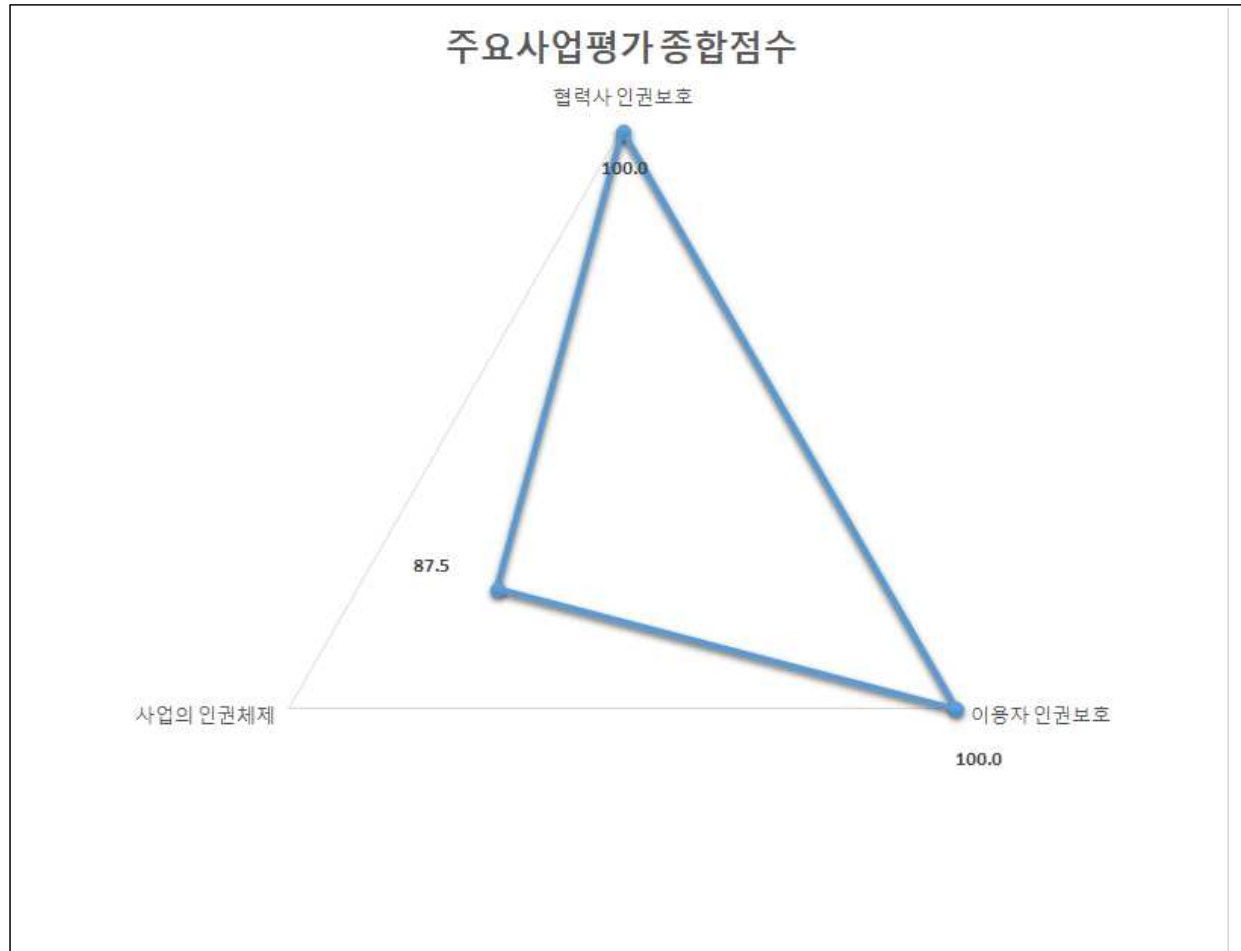
1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평가의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권리구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권고의견	- 특별한 권고의견 없음

3. 주요사업(나드리콜 사업) 평가결과

□ **종합 점수 : 95.8%** (24점 중 23점 획득)

-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95.8%로 우수한 상태
- ▶ 이용자 인권보호, 근로자 인권보호 분야 우수
- ▶ 사업의 인권체제 분야는 다소 보완 필요



No.	분 야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사업의 인권체제	4	8	7	87.5%
2	이용자 인권보호	5	10	10	100.0%
3	근로자 인권보호	3	6	6	100.0%
총점		12	24	23	95.8%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요×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 집계결과

- 총 12개 항목 중 예 11개, 아니요(미실시) 0개, 보완 필요사항 1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0개로 집계됨

No.	항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사업의 인권체제(4개 지표)	3	1	0	0	0	4
2	이용자 인권보호(5개 지표)	5	0	0	0	0	5
3	근로자 인권보호(3개 지표)	3	0	0	0	0	3
합 계		11	1	0	0	0	12

□ 주요사업 평가결과

(운영현황)

- 공단은 주요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예방 및 사후조치 방안을 갖추고 있음
- 공단은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내규 제21조에 이용대상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명백한 증빙이 없으면 우선권이나 특별한 다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공단은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는 운전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4채널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적발된 업무방해자들에 대해서는 1개월 이용제한 조치를 통해 강력히 제제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단은 나드리콜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교통약자 이용객, 운전원과 상담원 유지보수, 차량정비 협력업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단은 나드리콜 사업에 운용되는 차량의 친환경적 운행을 위해 다양한 상찬 캠페인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차량의 정비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협력회사의 윤리적인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만큼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과 주의가 약한 모습을 보임

- 공단은 이용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 조건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전산장애로 인한 서비스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고도화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상담원 및 운전원은 종종 이용자의 폭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용자의 인권만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권경영 도입 이후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공단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운전원은 장애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기에, 공단은 폭언 폭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4채널 블랙박스로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또한 언어폭력·성희롱·음주승차 등으로 업무 방해시 1개월 이용 제한조치와 같은 강력한 조치도 도입하고 있음
- 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는 운전원 및 상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심리상담, 템플스테이, 공연관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 확대하고 있음. 또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안마의자,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공하며 질 좋은 휴식과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권고의견)

- 본 사업의 협력회사는 차량 정비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협력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을 비롯한 안전규정 미준수, 폭언 폭설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보호 서약’ 또는 ‘CSR행동강령 서약’과 같은 예방적 조치는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은 인권경영위원회가 판단토록 하며, 협력회사에서 고의성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인권침해사건 재발 가능성이 잔존하는 경우 거래중지 및 일정 기간 계약 불가 적용 방침 도입을 권고

결과 그래프	달성률(%)		
<p>나드리콜 사업</p> <p>사업의 인권체제 이용자 인권보호 근로자 인권보호</p> <p>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p>	No	항 목	계
	1	사업의 인권체제	87.5
	2	이용자 인권보호	100.0
	3	근로자 인권보호	100.0
	전 체		89.3

IV

인권경영 주요 개선과제

1. 인권경영 개선 추진 권고

항목	진단 내용	추진 권고(안)
인권존중 정책선언	홈페이지에 인권헌장이 게시되어 있으나 내용 중 특별히 중요한 인권현황에 대한 표명이 없음	공단의 사업 특성 및 주요 인권현황을 반영한 인권선언문 표명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위수탁 사업이 대부분인 공단 사업 성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상에서 요구하는 지표간 괴리(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하거나 해당 없는 지표 다수 존재)	향후 인권영향평가 실행이 안정화되고, 주요 활동사항을 갖춘 후 인권경영위원 및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공단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마련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회사나 협력사의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범위가 규정으로 없음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인권영향평가 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 포함 필요 인권영향평가 대상 범위에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
인권경영 성과	인권경영 전담부서에 업무 편중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까지 총괄하는 인권담당자 지정 각 부서별 인권 담당자 지정
	경영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성적 성과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량적 성과관리 지표 없음	공단 특성에 맞는 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 고려 인권경영 신고 및 구제건수, 교육 시간 등 향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시계열로 3개년 수치 보고
	인권경영 관련 별도 모니터링 체계 부재	연 1회 인권경영 추진상황 파악·점검 인권담당부서 주관 또는 외주 진행
구제절차 마련	인권전문부서, 전문가가 아닌 경우 상담의 실효성 없으며 상담목적으로 의뢰하기 어려움	외부 전문 상담기관 추진 검토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세부 규정 없음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 지원내용, 제한 및 예외사항 등을 명시

2. 영향평가 분야별 개선과제

□ 기관운영 개선과제

분야	항목	세부 내용	개선과제(안)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공단 홈페이지에 인권헌장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기에 시인성이 부족하므로 공단 내 게시판 등에 게시 및 공고함으로써 공단의 인권경영 의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총무인사팀) 인권정책선언 공개 - 단기과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협력사와 협의하여 협력회사와 공단의 구제역할 명확화	(총무인사팀) 협력사와 대응방안 - 중기과제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기간제, 공무직, 실버직 등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	(총무인사팀) 복지제도 운영개선 - 단기과제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정	안전장구 및 비상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시 비상대피로 확보 관리가 필요하며, 그 외 재해발생시 공단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난관리팀) 비상시설 일상점검 및 재해지원 구체화 - 단기과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협력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평가하고 요구하는 절차와 문서를 갖추어야 하며, 협력사 인권보호 수준모니터링 필요	(회계팀) 협력사 인권침해 모니터링 - 중기과제
환경권 보장	비상계획 수립	현지주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및 대피훈련과 경보장치 마련 필요	(총무인사팀) 비상시 대피 및 경보강화 - 중기과제
소비자 인권보호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시설물 공사시 협력업체와 설계 사전평가 강화	(재난관리팀) 사전평가 강화 - 단기과제

□ 주요사업 개선과제

분야	항목	개선내용	개선과제(안)
사업의 인권체계	협력사 인권준수 요구	차량정비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인권준수 및 이행에 관한 요구 필요	(이동관리팀) 협력사 인권준수 요구 - 단기과제